

## 大學의 갈 길을 묻는다(上)

鄭 範 謨

(翰林大 總長)

---

여기서 필자는 주로 지난 30여 년간에 쌓인 병폐들을 분석하여 그것에서의 과감한 탈피를 호소하고, 새로운 飛躍을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시도하면서, 한국 大學의 向方에 관한 대학인과 정부의 성찰과 결의를 촉구하고 각기 교수의 입장, 학생의 견지, 행정직원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한국 대학에 있어야 할 모습을 염려하는 제 3자의 관점에서 숙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얼마 전에 한 老教授가 정년퇴임의 인사에서 이런 술회를 했다. “지난 40년 언제나 ‘이게 대학이야?’ 라는 의문과 울분으로 지내왔다. 이제 대학이 대학다워질 수 있는 때가 왔는데 퇴임하게 되어서 그것이 조금은 아쉽다.” 연유야 어쨌든 지난 30여 년 한국의 대학들은 대학답지 못했다. 또 한 교수가 회상한다. “70년대는 참 좋은 시절이었다. 학기가 시작하면 곧 테모가 벌어지고 축제도 벌어지고 한 달도 쉬고 두 달도 쉬고 놀고 먹었으니 말이다.” 이런 거의 自嘲의 인 회상 속에 지난 30여 년간의 한국 대학의 몹시 대학답지 못했던 자화상이 있다. 그러나 이제 문민시대가 왔다고 한국의 대학들이 積弊를 털어버리고 곧 “대학다워질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한 그분의 기대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한국의 대학은 지금 심각한 여러 挑戰에 직면

하고 있다. 그 도전에 대응하는 태세의 未備가 문제다.

첫째, 國家生存을 위한 세계적 ‘知識戰爭’의 도전이다. 그것이 요구하는 大學의 수월성 있는 교육력과 연구력이 너무 미흡하다. 지금대로의 한국 대학은 도리어 한국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혹평도 받고 있다.

둘째, 대학교육 자체의 國際化 추세라는 도전이 있다. 이제 한국 학생을 한국 대학에만 매둘 수는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국 대학이 불만이어서 외국 대학을 찾아가고 있다.

셋째, 대학교육의 ‘우루과이라운드’적인 開放化의 전망도 불가피하다. 이미 개방된 서비스업 종에 ‘기술적 진단’, ‘인문사회과학부문 연구개발’이 들어갈 추세다. ‘대학개방’의 압력이 밀려 와서 외국 명문대학들이 한국에 분교를 개설

할 날도 능히 예상할 수 있다.

넷째, 國內으로도 대학들은 생존경쟁을 벌여야 한다. 금년에도 대학 지망생은 9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격감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2006년까지 지금 대학들의 약 卅이 ‘閉店’,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한 전망도 있다. 물론 시시한 대학부터 자연 소멸할 것이다. “質만이 살아 남는다.”는 어떤 기업체의 기치는 대학에도 적용되어야 할 전망이다.

대학이 이런 도전에 대해서 應戰 태세를 구축하는 데에는 물론 시설, 재정 등의 物質的 동원, 대학경영의 규정과 관행 등의 制度的 개선, 그리고 대학관, 교육관 등의 精神的 재지향이 모두 어우러져야 한다. 또, 그 셋은 밀접히 상호 작용한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그 중 ‘정신적’ 요인에 주로 초점을 둔다. 우리는 그럴 필요와 절박성이 있다고 믿는다.

이런 사정 속에서 한국의 대학은 얼른 積弊에서 벗어나서 새 비약으로 향하는 變身을 해야 한다. 그러나 30여 년간 타성화된 대학 안팎의 여러 병폐들을 털어버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거기엔 학생과 교수와 대학 행정자 그리고 정부의 그만한 省察과 決意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 대학의 향방에 관한 그런 성찰과 결의를 호소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바라건대 이 논의는 각기 교수의 입장, 학생의 견지 또는 대학 행정자의 視點에서가 아니라, 그런 현재 신분의 당장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한국 대학에 있어야 할 모습을 염려하는 제삼자의 관점에서 음미되고 숙의되기를 기대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선 세계 대학의 역사와 한국 대학의 역사를 간단히 조감한 다음, 주로 지난 30여 년간에 쌓여진 많은 병폐들을 분석, 그것에서의 과감한 脫皮를 호소하고, 새로운 飛躍을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시도하려 한다. 이 논의는 꽤 심각한 自家批判의 分析을 전제로 한다. 한국 대학들의 각기 사정은 물론 서로 다르다. 이미 개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학에서는 아래에서 논할 여러 자가비관의 조항들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이 어떤 공통된 일반적인 병폐를 안고 있다

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서의 상황 분석은 일반론적인 분석일 뿐이다.

여기에서의 논의는 그 뜻도 일반론적이다. 즉, 대학이 가야 할 일반적인 方向을 논의하려는 것이며, 그런 방향 속의 어떤 구체안을 주장하려 함이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은 방향을 밝히기 위한 例示로 간주되기를 바란다. 구체적 방안들은 따로 숙의되어야 할 것이다.

## 大學의 歷史

우리는 우선 세계와 한국 大學의 歷史 속에서 오늘의 한국 대학의 位相을 살펴 보아야겠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절박성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世界의 大學

#### ① 教育, 研究, 奉仕

오늘날 이런 모습의 대학은 13세기 이탈리아에서 발상했고 곧 프랑스,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번져갔다. 그 초기의 모습에는 주로 의사, 성직자, 법률사를 기르는 職業教育의 성격이 강했다. 그런 모습으로 5~6세기를 흐르다가 19세기 독일 대학에 이르러서 學問의 自由와 研究의 기능이 강하게 등장해서, 교육과 연구가 대학의 二大支柱가 되었다. 다시 20세기 미국의 대학에 이르자 대학이 직접 인력 훈련, 자문, 지도로서 지역사회의 農工 발달에 기여한다는 奉仕의 기능이 두드러지게 된다. 오늘의 대학도 이런 교육, 연구, 봉사라는 세 기능을 수월성 있게 수행해야 할 임무를 지닌다. 이 셋에 不實할 때 대학은 그만큼 그저 ‘졸업장 공장’일 뿐 그 존재 이유를 잃는다. 그러나 물론 세 기능 중 어느 하나에 더 강조를 두는 자유는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13세기 대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대학의 조직과 운영에서 그 모델을 국가에서 독립하여 自律을 강조하는 ‘敎會’의 모델과 동업자들의 단결과 規律을 강조하는 ‘길드’의 모델에서 따왔다는 것은 상기할 만하다. 대학은 대외적인 순수한 자율과 대내적인 엄격한

규율을 생명으로 한다. 한국의 대학은 자율도, 규율도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 ② 대량화, 다양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여러 나라에서 대학은 두 가지 추세를 탄다. 즉, 급격한 대학인구의 대량화(또는 대량화)와 대학기능의 다양화의 두 추세다. 그렇게 대량화, 다양화된 교육의 수요, 연구의 수요, 봉사의 수요 속에서도 세계의 대학들은 그 수월성 유지에 간간히 힘을 쓰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학교육 대중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1992년 현재 해당 연령층의 大學 就學率 46%는 미국 다음 세계 제 2위고, 1960년 전후의 공동학교 취학률과 비등하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머리 속엔 ‘대학’ 하면 옛 소수 엘리트 대학을 떠올린다. 이런 ‘환상’이 도리어 교육과정의 부적절 등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월성 성취의 장애가 되고 있을 수도 있다.

### ③ 새로운 挑戰

21세기를 몇 년 후로 내다보면서 세계의 대학들은 그 새로운 挑戰에 대응하려 자신의 刷新을 서두르고 있다. 그것은 ‘知識産業’이 주종이 되는 정보사회에서는 대학은 이제 상아탑이 아닌 ‘社會中心’에 놓이게 되며, 대학기능 수행의 盛衰는 그대로 국가의 성쇠에 이어진다는 강하고 절박한 인식 때문이다. 한국과 그 대학은 이 未來社會의 법칙의 권외에 놓여 있지는 않다. 우리에게도 대학의 세신 없이 한국은 국제적 落伍者를 면할 길 없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필요하다. 세계의 대학들은 지식의 國際戰爭의 최첨단에 놓여 있는 셈이며, 그 하루 한 시간의 不實은 그대로 그 나라의 ‘戰力’ 감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韓國의 大學

### ① 初期의 混同

한국의 대학은 실질적으로 8·15 해방 후의 일이다. 그것은 해방과 한국동란으로 인한 사회불안, 教授人力 不足, 빈곤 등의 악조건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독일식과 미국식의 大學觀의 混同이 초기에서부터 대학의 길을 혼돈스럽게 했다. 독일식 대학관은 日帝時 帝國大學에서 이어져 왔다. 그것은 오늘의 독일

이 아니라 20세기 초기에 일본이 배워온 옛 독일의 대학을 말한다. 미국식 대학관은 美軍政에 의해서 심어졌다. 한국의 대학은 여러 가지로 아직 그 혼동으로 인한 차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독일 대학에서는 여러 심사와 긴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教授되기는 어려워도, 한번 되면 실질적으로 終身制였다. 대신 미국 대학에는 이력서의 심사만으로 교수로 채용될 수 있을 정도로 교수되기는 쉬워도, 되고 나서 연구나 교육이 시원치 않으면 쫓겨나게 마련이다. 한국은 지금까지는 교수되기도 쉽고, 되고 나면 또 거의 종신제에 가깝다는 ‘便利’ 것만 따 혼동이 있었다. 또 ‘學點’은 미국식 제도이고 필수과목이 많은 것은 독일 ‘講座制’의 유물이다. 다른 혼동도 많다.

더구나 日帝時의 帝國大學은 休講을 다반사로 여기는 惡習을 남겨 놓았다. 그 때의 帝國大學 ‘豫科’에서는 휴강이 없었으나, ‘本科’에서는 몇 주 휴강은 보통이었다. 교육 자체보다 帝國大學에 선발된 소수의 특수 身分에 도취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셈이었다. 그 악습은 시대착오적으로 지금도 한국 대학 캠퍼스에 남아 있다.

### ② 그래도 自律

그래도 '50년대 한국 대학은 그 후 '60년대 이후에 비해서 훨씬 많은 自律을 누렸다. 정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외엔 入試方法 外하에 하등 정부의 간섭이 없었고, 교과과정에도 별 간섭이 없었으며, 학생지도에도 전혀 간섭이 없었다. 教授會도 활발했다. 대학마다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한 연구도, 실험도 많았다. 이런 자율은 '60년대 軍事政府가 들어오면서 소멸되어 갔다. 이와 더불어 자발적인 대학세신을 위한 노력도 소멸되었다. 물론 몇몇 사립대학들이 이 자율을 악이용하여 ‘謀利的’으로 대학을 운영한 사례가 있어서 사회의 물의를 크게 산 것이 후속하는 통제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 ③ 팽창과 위축

1961년에서 1993년까지 긴 32년의 軍事政權의 세월은 이 나라에 경제발전은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大學에 관한 한 그것은 심한 통제에 따

른 무모한 外的 팽창과 內的 위축의 시대였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모든 대학의 入試를 관장했다. 교양과정에 '정책과목'을 삽입했다. 학생지도 요령을 시달렸다. 심지어 교수에게 강의의 成績을 내는 방법까지 시달할 정도 있다. 준비 없는 돌발적 定員 팽창은 대학환경을 低劣化했고, 광범위한 통제는 대학의 자발적 개별적인 개선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위축시켰다. 오늘 한국 대학에서의 積弊의 거의 모든 부분이 이 통제의 32년에 기인한 것이고, 그 통제와 적폐의 慣性과 여진은 지금도 짙게 남아 있다.

#### ④ 反抗, 懷柔, 放縱

30여 년간 군사정권의 대학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학생데모 防止'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실 그 30여 년은 세계에 유례없이 긴 세월의 학생데모로 점철된 역사를 기록했다. 후에 재론하겠지만, 거의 모든 大學教育政策이 데모방지의 필요에서 구상되었고, 이를 위한 온갖 統制가 대학에 가해졌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본래 그간의 학생데모는 방지되거나 근절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모든 표면적인 이슈의 뒤에 도사리고 있던 것은 언제나 軍事政權의 정치적 非正統性에 대한 反抗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꾸준히 反抗했다. 그 반항의 '正當性' 앞에 受講 포기, 休講, 休業, '적당히' 성격내기, 소란, 소음 등 大學의 學習規律은 크게 무너져 갔고 그것이 관행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런 반항을 하지 않게 '달래드라고' 정부는 학생에 대한 온갖 懷柔策도 썼고 그것이 또 여러 積弊를 형성하게도 되었다. 학도호국단 간부에 대한 장학금 지급제도도 이 때에 생겨나서 학생회가 된 지금에도 그 제도는 지속되고 있다. 데모를 하지 않는 한, 운동회와 축제로 강의를 안하는 것은 묵인되었고 때로는 장려되기도 했다.

6공화국은 放縱의 放任을 民主化로 오인했다. 이런 방임된 상황, 여전히 軍人政權이라는 상황, 그리고 종래 억눌림에서의 해방이라는 상황에서 데모는 더 격화되었고 대학내 분위기는 더욱 無秩序가 짙어졌다. 캠퍼스는 무질서한 소음과 뼈타에 시달렸다. 이렇게 오랜 30여 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 대학의 각종 병폐가 쌓여져 갔다.

文民政府의 등장으로 학생데모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학생의 정치적 활동은 극히 일부 학생에 한정되고, 그것이 대부분 학생의 호응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 대학은 지금도 지난 날 32년 데모 역사의 심한 여리 후유증을 앓고 있다.

### 청산되어야 할 積弊들

회사건 학교건 병원건 나라건 한 組織에는 최소한 달성하려는 일정한 標準과 그것을 지키려는 規律과 거기에서 이룩되는 生産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그 조직은 침체와 쇠퇴의 길에 들게 마련이다. 大學도 그 예외는 아니다. 표준의 식이 허약하고 표준을 지키려는 규율이 흐려서는 제대로의 생산이 될 리가 없다. 이것이 지금 자주 공론의 비판에 오르는 한국 대학의 상황이다. 주로 지난 30여 년에 쌓인 병폐들은 대부분 이런 대학 표준의식과 규율의식의 解弛에 관계된 것들이다.

이런 紀綱의 해이는 그것이 필연 학문적 교육적 生産 자체의 低調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표준과 규율의 해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자율과 규율의 필연적인 연계 때문에 대학의 생명인 自律의 훼손을 초래하며, 대학이 필요로 하는 각종 外部支援의 의욕도 냉각시킨다는 심각한 문제를 수반한다. 사람들이 규율없는 대학에 자율을 허용함을 꺼릴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해이된 대학에의 지원은 '개진 독에 물 붓기'로 여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 대학들의 여리 理想的인 향방을 가늠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도대체 체질 자체가 허약한 아이를 놓고 수형선수로 기르느냐 축구선수로 기르느냐라는 논의가 무의미하듯, 그래서 우선 그 체질부터 튼튼하게 고쳐야 이야기가 되듯이 대학의 향방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대학의 병든 '체질'부터 고쳐야 한다.

#### 엄청난 授業결손의 復元

대학과 학생과의 가장 原初的이고 천지이변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 어기지 말아야 할 가장 '신성한' 약속 또는 규율은 교수의 授業이고 학생

의 受講이다. 즉, 일정한 강의를 일정한 기간 빠짐없이 듣고 일정한 성적을 성취하는 일이다. 한국의 대학에는, 물론 예외와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연유로 그것이 일반적으로 마구 깨진다. 현재 한 학기 16주 강의로 규정되어 있는 약속을 교수도 학생도 대학 자체도 그리고 정부마저도 마구 파기해버리고, 대개는 잘해야 12주, 어쩌다 보면 10, 8주 강의로도 한 학기가 지나간다. 이렇게 ‘놀이 먹는다’ 대학은 세계에 없다. 그래도 성적이 나오고 졸업이 된다. 심한 규율해이, 기강 해이의 사례다.

교수 중에는 학기말, 학기초에 ‘적당히’ 휴강하고 일찍 종강하는 관례가 아직도 남아 있다. 학기 도중에 세미나, 자문, 위원회 등으로 휴강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 학생은 MT에, 체육대회에, 축제에 휴강을 조르고 감행한다. 데모나 ‘파업’이 있을 때는 수주가 잘려나간다. 학과에서는 ‘답사’, ‘현장견학’, ‘수학여행’, ‘체육특기생 경기출전’, ‘학과의 날’의 이름으로 2~3일을 휴강한다. 예컨대 역사과 학생이 학과의 ‘답사’ 때문에 휴강할 경우, 그 학생이 다른 학과 강의도 듣고 있다면 역사과 강의와 다른 과 강의가 ‘二重’으로 휴강이 된다. 외부인사 초청 강연도 수업시간에 실시하고 거기에 출석하도록 소정 강의의 휴강을 종용한다. 대학에서는 중간시험, 학기말 시험에 각각 한 주씩 배당하기 때문에 16주는 아예 미리 14주로 자르고 들어간다.

정부 자체도 한 때는 ‘집체훈련’ 등 군사훈련의 일부로 학기 도중 한 주를 몽땅 잘라간 때도 있었다. 그 많은 국경일 휴일도 들어간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해방 이후 줄곧 한 학기 18주 강의였던 규정을 5곳에서 16주로 줄였다. 숨은 이유는 ‘데모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라.’는 것이었다.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는 7월 20일경까지 공부하는데 더 공부해야 마땅할 대학은 한 달 일찍 6월 20일경에 방학하는 버릇을 무엇으로 合理化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학의 放學은 명목상 여름 두 달, 겨울 두 달 반, 실질적으로는 합계 거의 5개월을 넘는다.

무서운 사실은 이런 授業紀綱의 해이는 대학의 다른 모든 기강 해이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수업을 ‘적당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해이

는 다른 모든 학내의 규정, 규율, 약속, 공중도덕까지 적당히 해도 좋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기강도, 교육평가의 기강도 무너지고 학내 청결, 질서, 정돈, 정숙이라는 공중 기강도 마구 무너진다.

수업기강 해이의 비릇은 한편 日帝 제국대학 약속의 유산이고 또 한편 데모 攻防으로 얼룩진 軍事政府가 조장한 폐습이다. 일제 제국대학의 약속은 벌써 청산했어야 했다. 일본 대학 자신들은 그 비릇을 청산한 지 오래다. 이제 군사문화가 원인이 된 폐습도 청산해야 한다. 몇 가지 학생과 교수와 행정자의 결의가 있음직하다.

첫째, 한 학기 16週 강의는 절대 ‘불가침’으로 ‘장식’됨이 없이 엄수되어야 한다.

둘째, 마지막 1주만은 學期末 시험기간으로 할당하되, 中間시험 기간은 없앤다(중간시험 기간 설정도 유신정권 때 ‘제도화’한 것이다).

셋째, 축제, 운동회, 답사, 수학여행 등 모든 課外活動과 다른 수업에 지장이 있는 集中 教授活動은 반드시 수업에 지장이 없는 방과 후, 주말, 방학기간에 실시한다.

넷째, 지금대로의 體育特技生制度는 대학 전반의 극심한 수업기강 해이의 심각한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혹 입학에서 체육만 아니라 예능 등 기타 특기도 적절히 인정한다 해도 기본적인 修學能力은 있어야 하며, 또 수학중 연습이나 출전을 빙자한 缺講 특혜와 성적 특혜는 없어야 한다.

다섯째, 國慶日을 포함하는 年中 休日制度는 어느 정도 대학 자체가 독자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休日은 너무 많고, 동강이나 있기 때문이다. 공장도 월요일을 쉬면 1주일의 생산성이 1/6이 감소되지만, 동강내서 수요일을 쉬면 1/6보다 훨씬 많은 1/5 또는 1/4의 생산성 감소가 생긴다. ‘정신노동’인 공부에서는 더할 것이 뻔하다.

여섯째, 大學社會가 싫어할지 모르지만, 한 학기 수업 일수는 5곳 때 잘려나간 2주를 다시 찾아서 어느 때엔가는 18주로 복원해야 한다.

#### 學園의 政治의 超脫

지난 30여 년 격렬한 정치적 정통성 시비로 얼

특진 불행한 政治史 속에서 학생활동은 불가피하게 정치일변도화 했다. 寧日이 없던 학생시위의 사회적 정치적 적절성 여부에 관계없이, 그 때문에 대학은 대학으로서의 기능수행에 수업결손, 학내질서 해이 등 심한 차질을 경험했다. 좀 심하게 말해서 지난 30여 년 대학생은 데모 하느라 바빠서 공부는 제쳐 놓았고, 정부는 데모 막느라 바빠서 대학정책은 잊어버렸다. 급박한 국제적 지식경쟁 속에서 대학이 지식 생산의 제 모습을 찾고 國家의 未來에 대한 책무를 다 해야 한다면, 이제 경통성 있는 文民政府의 탄생과 더불어 이런 상황은 학생, 교수, 행정책임자에 의해서 심각하게 성찰되고 再指向되어야 한다.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정치적 경통성 시비의 증언과 더불어 대학생들의 정치적 集團行動은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 自制하는 모습도 역력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생들은 과잉된 정치적 활동의 관심에 집착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날의 데모 政防에서 빚어진 심리적 제도적 후유증들은 남아 있다.

學校 밖에서 학생 또는 교수가 소수건 또는 다수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건 어떤 정당적 활동을 하건 그것은 민주사회에서의 시민의 권리다. 학생 또는 교수라고 그 권리마저 부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넓게 합의되는 국가 위기의식 아래 대학의 正常狀態마저 저버려야 하는 '백척간두'의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대학의 사명은 제대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 '知識戰爭' 속에서 절박한 시대적 공동의식이라면, 學內에서만은 政治的 超然이 지켜져야 한다.

學內에서도 교실에서의 자유분방한 정치적 토론은 허용되어야 하고 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원에서 어떤 집단이 소수건 다수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려는 정치적 선전, 선동, 집회는 이제 심각하게 자제되어야 한다. 본래 학교가 정치 활동장일 수는 없고, 이런 활동으로 인한 손모적인 수업방해와 결손, 무질서와 소음과 난장은 대학의 대학으로서의 기능수행을 마비하게 하고, 그것은 바로 국가 미래의 손도를 뜻하기 때문이다.

긴 세월 데모의 공방에서 빚어진 심리적 후유증은 學生 자신들이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들이 저항하던 軍事文化的 심리에 물들게 되었다는 데에 있다. 즉, 비상시, 戰時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敵對의 논리, 저항의 논리, 흑백의 논리가 그것이다. 權威의 논리, 위계의 논리, 힘의 논리가 그것이다. 過激, 展示, 수단이나 절차를 가리지 않는 目的偏向의 논리가 그것이다. 학생들은 정치문제에서만 아니라 學內의 다른 여러 문제에서도 이런 적대, 흑백, 힘, 목적편향의 논리를 적용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군사의 논리에는 군사의 논리로 대항할 수밖에 없었던 때문이다. 정부는 학생을 '적'으로 보고 학생은 정부를 '적'이라고 부른 데모라는 비정상적인 '戰時'가 빚어낸 논리들이다. 그러나 이들 논리는 이제 문민, 평화, 정상적 시절에 있어야 할 협조, 이해, 온건, 절차의 논리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데모예방을 위한 '회유책'으로 또는 군사문화 자체의 소산으로 여러 비정상적인 제도들이 시행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 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환원되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교련, 국민윤리, 국사 등의 과목이 획일적으로 '국책과목'이 된 적이 있었다. 이것은 환원되었다. 그러나 등록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배당하는 제도, 학생회 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는 학도호국단 시절 '회유책'의 유물이다. 體育特技生에게 특별배려를 '강요'한 것도 展示의 논리에 뿌리를 둔 제도라고 해야 한다.

여기에서도 몇 가지 제안을 적는다. 그 대부분은 학생들의 自制와 이해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는 제안들이다.

첫째, 학내에서의 學究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政治的 활동은 이제 禁禁로 자제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회와 대학신문 등 학생활동은 좁은 政治指向에서 탈피하여 넓게 예술, 스포츠, 학문, 사상, 사회문제 전반에 관심을 두는 文化指向으로 방향지어져야 한다. 사회 문제에서도 정치만 아니라 환경 오염, 생태 파괴, 소비자 보호, 세계의 미래 등도 포함하는 넓은 시야가 조장되어야 한다.

셋째, 정치적 활동에의 관심을 갖진 안 갖진 간에 그간 학내 정치활동으로 헤어진 모든 學內秩序만은 이제 正常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듣기 싫어도 '강제'로 듣게 하는 확성기 집회, 라디오 방송, 농악 등의 騒音이라는 '暴力'은 인권존중의 견지에서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게시판의 면적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건물의 외벽이건 내벽이건 보도에까지 大字報를 붙이는 질서없이 視野攪亂이라는 '폭력'도 자제되어야 한다. 또 이런 질서 해이에 편승해서 생겨난 교내 飲酒의 광경도 자제되어야 한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색해야 하는 대학은 그 환경이 본래 다른 어느 곳보다도 조용하고 차분하며 깨끗해야 할 곳이다.

넷째, 학생회 간부, 기타 '봉사직'에 獎學金을 급여하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은 유신정권 때 학도호국단 간부의 최유책으로 실시된 제도의 유물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봉사한다는 학생 지도자가 학생들에 앞서 이득을 먹어버리는 것도 지도자답지 않고,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다. 도리어 학생회 간부는 자진 장학금을 반환하고 사절해야 마땅하다.

지난날은 악몽 같이 불가피했다고 하자. 그러나 정통성 있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 우리는 어쩌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즉, 타성에 집착해서 학원이 계속 정치 활동장이 되어 대학 본연의 사명에 계속 손모를 가져오고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느냐 아니면 결연 학원만은 초연하게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내일을 충실하게 하느냐라는 선택의 기로다.

#### 친근한 教授—學生 관계

32년의 데모 역사는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를 심히 疎遠하게 만들어 버렸다. 거기엔 대학생 인구를 무모하게 급팽창하게 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 : 학생 비율이 1 : 30, 1 : 40이 '정상'이 되고만 연유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우선 기묘한 '학생지도' 역사의 탓이 있다. 정부는 학문밖에 모르는 교수에게 '학생데모 못하게' 학생지도하라고 독촉했고, 학생은 그런 교

수를 "죽대 없다."고 경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학생지도란 하기도 어설프고 받기도 계면쩍은 일이 되었다. 학생지도라고 하는 으레 있어야 할 일이 이상한 어감을 지니게 되었다. 그런 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비', '부담지도수당'이라는 예산항목까지 생겼다. 그것은 마치 학생지도가 교수 본연의 平常勤務 책임의 일부가 아니라 따로 돈 받으며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상마저 주었다. 학생지도비가 도리어 학생지도를 위축시켰다는 말이 된다.

본래 대학에서 학생지도의 주체는 교수가 자기 학문에 관계되는 學習內容과 研究內容에 관해서 학생을 개별지도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삶의 문제에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연결될 수는 있다. 카운셀링 전공교수가 아닌 다른 학문 교수에게는 심리적 상담적인 학생지도란 그의 能事일 수가 없다.

둘째로는 이렇게 학생지도가 어설픈 일이 된 여과로 일부 대학교수의 勤務 의식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예외는 많지만, 흔히 한국의 대학교수 사회에서는 1주 40시간 근무가 아니라 '책임시간' 9시간 이외엔 '자유'라는 의식이 강하다. 그래서 학생과 강의시간 외에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은 '교수 만나기'가 어렵고 또 교수 만나기를 어려워 한다. 이것이 혹은 한 대학의 교수 외에 다른 대학에 시간강사로 나돌아 다녀야 했던 '50년대의 遊歷일지도 모르나, 앞에서 논한 대학사회의 일반적인 기강 解弛가 더 큰 원인일 것이다.

셋째로는 교수의 研究 수행 형태에도 문제가 있다. 가장 좋은,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친근할 수 있는 학생지도는 교수의 研究 프로젝트에 학생이 參與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대학원생만 아니라 학부의 학생도 적절하게 대학 시절에 한두 번쯤은 교수의 연구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본래 독일의 훔볼트식의 大學觀 이래 교육과 더불어 研究가 대학기능으로 등장한 데에는 교수 혼자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연구참여가 최상의 교육방법이고 학습방법'이라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대학에

서 진행되는 모든 연구에는 꼭 학생이 어떤 모양으로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좋은 학생지도 기법이다.

학생과 교수가 가까워지는 길로써 흔히 같이 야외에 놀러가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여행가고 하는 일을 제안한다. 그것도 무방하다. 그러나 가장 '교수와 학생'다운 親近感은 이렇게 學齋와 研究 장면에서의 개별 또는 직접적 접촉에서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몇 가지 제안이 있다.

첫째, 교수의 본연적인 機能에는 교육, 연구, 봉사 이외에 學生指導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야 한다. 한 때 테모 방지를 위해서 어색하게 실시된 '부담지도교수제'가 學事指導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교수제를 부정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수가 학생 개개인을 그의 학적부 기록, 기타 수학진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면밀히 추적하면서 학과등록, 기타 학사를 지도하고 충고하는 일은 제도화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은 원칙적으로 교수의 강의시간 이외엔 언제나 교수들을 面談할 수 있어야 한다. 교수는 충분한 시간의 '던담시간'을 공개하고 면담을 적극 중용하고 또 개별면담이 필요하게 되는 교수방법을 사용할 만하다.

셋째, 후에 재론하겠지만, 대학에서의 研究에는 어떤 모양으로든 대학원생만 아니라 학부생도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閉鎖性的의 극복

한국의 대학은 심한 각종 폐쇄성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대학의 未來 對備의 작업은 그 폐쇄성의 극복 내지 타파를 포함해야 한다.

우선 學科間, 大學間의 학문적 교육적 폐쇄성을 들어야 한다. 그 폐쇄성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 본래 대학, 특히 綜合大學이란 '열려 있는' 학과들의 '커뮤니티'를 말한다. 서로 닫혀 있으면 그것은 '종합'대학이 아니고 학과들의 '섬'들의 '집합'에 불과하다.

본래 종합대학의 장점과 아름다움은 그 속의 여러 학문, 학과들이 서로 풍부하게 상호 交叉作用할 수 있는 데에 있다. 예컨대 사회학과 敎授가 연구 또는 교육의 필요에서 또는 그저 호기심에서 역사학, 경제학 또는 동물학, 천문학

교수와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사회학과 學生도 그의 학수, 연구, 취미의 필요에 따라 사회학 강의만 아니라 철학, 문학 또는 물리학, 수학의 강의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종합대학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단과대학 그리고 그 속의 學科들이 '자기' 학생들을 규정상 졸업에 필요한 專攻履修 학점 60점 이상을 더 또는 모두 '자기' 과 科目만 이수하게 '속박'해 놓는 것은 너무 폐쇄적인 교육정책이다. 도리어 그 60학점 이외는 넓게 다른 학과 과목을 듣게 권장하고, 60학점의 전공과목 중에서도 몇 과목은 관련된 他科의 과목을 지정하는 開放性이 필요하다. 그리고 自由選擇, 副專攻, 複數專攻도 제도상으로는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 뒤에는 학문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學問領域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이른바 學際間 영역에서 새로운 개척 분야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연이 있다. 그리고 한 분야, 예컨대 과학에서의 創意的 아이디어의 힌트를 다른 분야, 예컨대 신화학 철학에서의 개념을 比喩的으로 반전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연도 있다. 어떤 논자는 현대사회에서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피카소와 같은 天才가 희귀한 것은 대학 등에서의 조기의 편협한 專門化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창의적인 정신은 유연한 정신이고, 유연은 多樣性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런 '폭 넓은' 학습을 한 대학생들이 현대사회 산업구조에서 더 有用하다는 사연도 가세한다.

점차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敎授 採用, 總長 選任 등에서의 동창, 동교, 동향, '동파'의 인사를 선호하는 폐쇄성도 꽤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다. 교수의 두 學科 兼任制度도 開放性이라는 견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개방성 진작의 한 열쇠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미묘한 폐쇄성은 自律에 관한 피상적 해석에도 깃들여 있다. 대학사회에는 모든 면에서 가능한 한 자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도 완전 恣意의 자율이란 없다. 집단의 자율은 언제나 여러 요인, 집단 간의 相互牽制의



균형의 틀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나라의 통치가 分立된 三權의 상호견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같은 이치다. 아무리 대통령이 ‘성인 군자’ 같아도 그를 다 믿지는 않고 그를 견제하는 어떤 세력을 마련한다. 대학교수의 自律, 학생의 자율도 어떤 열려 있는 상호견제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굳게 닫혀서 외부의 아무런 교란도 조사도 감독도 평가도 안 받겠다는 自律은 退行과 萎縮 아니면 獨善과 腐敗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대학, 학과 그리고 교수도 스스로를 ‘열어야’ 하고, 정당한 평가와 견제를 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어떤 모양의 教授評價制로서 평가와 견제를 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유쾌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自律人으로서의 교수가 감내해야 할 대가다. 여기에서도 몇 가지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대학의 教科課程과 教科運營은 지금보다 훨씬 개방적이어야 한다.

둘째, 대학 운영에서는 ‘자율’의 이름으로 각 부서, 각 집단이 폐쇄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정말 自律에 필수적 개방적인 상호 협의, 상호 조언, 상호 평가, 상호 ‘견제’의 분위기와 절차가 있음직하다. 예컨대 생물학과 교육과정 구성에 화학과 교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망발은 아닐 것이고, 교수 채용에서도 어느 한 부서의 독단보다는 학과, 대학, 본부의 의견을 상호 조절하는 절차가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교육, 연구, 사회봉사에 걸친 교수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는 教授評價制는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할 제도다. 모든 公共組織에서 어떤 모양의 人事評價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

(다음 호에 계속)